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03면	특별자치시·도의회 의정박람회	1
江原日報	03면	“제주 외자 유치·재정권 확보 적극 벤치마킹”	1
KBS 춘천	온라인	[단독] 전자철판을 유치원까지?...감사원 서류 확인	2
강원도민일보	06면	"골목상권 살리기·경제활성화 협력 최선 다할 것"	3
에너지경제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 '한국국방과학고' 지역주민 ...	4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이현종(왼쪽) 철원군수·엄기호(철원) 도의원	5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박대현(화천) 도의원	5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최종수(평창·왼쪽) 도의원·최기성 평창고랭지김장...	5
강원도민일보	13면	[동정] 심오섭(왼쪽) 사회문화위 부위원장·박호균 도의원	5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윤길로(영월) 도의원	5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6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인구 153만 붐과 ... 여권발 '메가시티서울' 우려	7
강원도민일보	03면	춘천·원주 빼고 다 줄었다... 동해안·폐광지 인구 감소 심화	8
江原日報	02면	"공공기관 이전 대상 비핵신도시 포함하라"	9
강원도민일보	13면	강릉화폐전시관서 신사임당·울곡이이 만난다	9
江原日報	02면	설악산 중청대피소 새로 짓는다	10
강원도민일보	10면	춘천시 의료 시스템업 센터 제동 '비상'	11
강원도민일보	12면	원주시 '선택과 집중' 긴축재정 강화 돌입	11
江原日報	01면	'강릉 29도' 때아닌 여름 날씨 벼이삭 다시 패고 봄꽃 활짝	12
江原日報	25면	[사설]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복구, 국회가 나서야	1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풀뿌리 민주주의 외면할 것인가	1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윤 정부 '지방시대' 균형발전 헛말되나	15
江原日報	25면	[사설] 소상공인 빚 평균 1억2,700만원, 돌파산 막아야	16

강원도민일보

2023 11 03 ()

03



특별자치시·도의회 의정박람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주관한 '특별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에 참가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 등 강원·세종·전북 의장단들은 2일 제주신화월드를 방문, 특별자치 권한 활용 사례 등을 살폈다.

江原日報

2023 11 03 ()

03

“제주 외자 유치·재정권 확보 적극 벤치마킹”

자치도의회, 지방분권 박람회 참가 신화월드 등 방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일 제주 신화월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강원자치도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살폈다.

도의회는 지난 1일부터 제주에서 열린 지방분권 의정박람회에 참가해 특별자치시·도로 출범한 제주와 세종, 특별자치도로 출범 예정인 전북 의회와 교류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은 제주, 한국, 세계의 신화·역사가 조화를 이룬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 김기홍·한창수 부의장, 심영곤 운영위원장, 최승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특위 위원장, 박용식 사무처장 등이 동행했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외자 유치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3조원 이상이 투자됐다고 들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사업을 원만하게 이끌어온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권 의장은 “강원자치도 출범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게 경쟁력을 강화해 고용 창출을 하고 잘살 수 있는 토대를 만

들어 가야 한다”며 “3차 특별법에서·군실정에 맞는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상당한 부분에서 권한 이양을 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힌 최승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특위 위원장은 “강원자치도는 자치재정권과 관련해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는데, 의회에서 적극 대응해야겠다는 걸 느꼈다”고 강조했다. 박용식 도의회 사무처장은 “제주자치도에서 살펴본 사례들을 강원자치도의회 차원에서 검토, 미래 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을 구체화할 특례 발굴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현정기자

2023 11 02 ()



[단독] 전자칠판을 유치원까지?...감사원 서류 확인

앵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처음 158억여 원을 들여 전자칠판을 학교에 보급합니다.

하지만 강원도의회 심의 이후, 보급 대상을 유치원까지로 바꾸면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2일) 감사원에서 강원도교육청을 찾아 방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다양한 전자 기기와 연결해 수업에 활용하는 전자칠판.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전자 칠판 보급에 나섰습니다.

내년 2월까지 강원도 초·중·고·특수학교에 2,000여 대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한 대에 740만 원씩, 158억 원의 예산도 마련했습니다.

이런 계획으로 5월에 강원도의회 심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강원도교육청이 사업 계획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보급 대상에 공립·사립 유치원을 포함시킨 겁니다.

미래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선투자라는 설명입니다.

[김영재/강원도교육청 미래체육특수교육과 장학관 : "지금 한창 미래형 교과서로 디지털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으니 유치원도 그런 측면에서 보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한정된 예산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입니다.

실제 최종 전자칠판 보급 계획에는 유치원으로 240여 대가 배정됐습니다.

이를 위해 초·중·고에 배정된 물량에서 25대, 50대, 156대 씩을 줄였습니다.

결국, 전자칠판의 사용 빈도가 가장 많은 초·중·고의 배정량이 줄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 지금의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 과정은 필기 위주 학습보다 놀이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유치원은 전자칠판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관계자/음성변조 : "전자칠판 신청은 안 했어요. 저희는 지금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서요."]

감사원도 이번 사업과 관련해 두 번째 강원도교육청을 방문해, 사업 변경 과정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어요. 그게 좀 추가적인 것이 있어서요."]

이번 전자칠판 보급 사업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식 감사 개시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여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김영준 yjkim1@kb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11 03 ()

06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2일 춘천 스키이컨벤션에서 '2023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대회'를 개최했다. 황선우

“골목상권 살리기·경제활성화 협력 최선 다할 것”

도 소공연 제1회 소상공인 대회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2일 춘천 스키이컨벤션에서 '2023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상공인 대회에는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신경호도 교육감, 김기철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백순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장희양 강원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장, 이극상 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강원지역 소상공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지역연합회 입장과 함께 지

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연합회원 대내·외 표창 시상식, 2023 소상공인연합회 영상시청 및 경품추첨 등이 진행됐다.

이극상 회장은 “연합회는 회원들과 함께 강원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소상공인의 노력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업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과 지원도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도·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강원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더 많은 도 소상공인 연합회 회원이 모여 도·지자체와 더욱 든든한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선우

2023 11 03 ()

에너지경제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 '한국국방과학고' 지역주민 설명회

박에스더 ess003@ekn.kr



▲신경호 도교육감이 지난 1일 한국국방과학고 주민설명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원자치도육청]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1일 오후 철원군 태봉웨딩홀에서 한국국방과학고 주민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주민 설명회에는 신경호 도교육감, 이현종 철원군수, 엄기호 도의원, 김익권 육군23여단장, 정문걸 철원교육장, 허남호 중등교육과장, 강원 직업계고 학교장, 김정수 학교운영위원장 및 총동문회장과 학부모회장을 비롯해 주민 등 200명이 참석했다.

이날 △국방과학고의 미래 비전과 방향 제시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 추진 배경 및 기대효과 안내 △타시도 학생 유치에 통한 인구정책 소개 △국방고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안내 △기숙사·실습동 신축 등 주요 계획 안내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허양욱 교장은 "철원군의 지리적 특성과 학령 인구의 급감으로 김화공업고는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방 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한국국방과학고의 무궁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경호 교육감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해결하는 최선의 대책은 '좋은 교육'이다"라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직업계고의 혁신적 재구조화를 통해 타시도 학생 1000명을 유치하고 공부 잘하는 강원 직업계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ss003@ekn.kr

강원도민일보

2023 11 03 ()

17

·엄기호(철원)도 의원은 3일 오전 10시 철원 노동당사에서 열리는 제23회 평화통일기원 DMZ 걷기대회 개최식에 참석한다.



이현중(왼쪽) 철원군수

강원도민일보

2023 11 03 ()

17



·박대현(화천)도 의원은 4일 오후 3시 화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2023년 화천군 평생학습 동아리 발표·전시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1 03 ()

13

도 의원은 5일 오전 11시 강릉강남축구공원에서 열리는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 18개시군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1 03 ()

16

지김장축제 개막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1 03 ()

16



·윤길로(영월)도 의원은 4일 오전 9시 영월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영월군수배 종목별 군민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한다.



최종수(평창·왼쪽)도 의원·최기성 평창고랭지김장축제위원장은 3일 오전 11시 평창송어축제장에서 열리는 제6회 평창고랭



심오섭(왼쪽) 사회문화위 부위원장·박호균

2023 11 02 ()

江原日報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춘천)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박관희(춘천) 도의원은 3일 오후 1시 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열리는 '청년이 만드는 살만한 세상'에 참석.

김기철(정선) 경제산업위원장은 3일 오후 2시 철원동송농공단지에서 열리는 철원 반도체공장 준공식에 참석.

심오섭(강릉) 도의회 사회문화부위원장은 5일 오전 11시 강릉 강남축구공원에서 열리는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 18개시군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

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부위원장은 3일 오전 10시30분 인제다목적구장에서 열리는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인제읍)에 참석.

최종수(평창) 도의원은 3일 오후 1시30분 평창 진부 켄싱턴호텔에서 열리는 2023 평창군 사회복지사 대회에 참석.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5일 오후 2시 속초 척산온천휴양촌 자연황토길에서 열리는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 속초시지회 발대식에 참석.

윤길로(영월) 도의원은 4일 오전 9시 영월군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영월군수배 종목별 군민생활체육대회에 참석.

박호균(강릉) 도의원은 5일 오전 9시30분 강릉 단오문화관 앞 단오공원에서 열리는 바르게 살기운동 강릉시 회원 한마음대회에 참석.

박대현(화천) 도의원은 4일 오후 3시 화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2023년 화천군 평생학습 동아리 발표.전시회에 참석.

엄기호(철원) 도의원은 4일 오후 1시 철원 와수초교 운동장에서 열리는 와수초등학교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

2023 11 03 ()

강원도민일보

01

강원인구 153만 붕괴...여권발 '메가시티서울' 우려

지난해보다 7839명 감소
 전체 인구 3%도 못미쳐
 수도권 블랙홀 현상 심화
 정부 지방시대 구현 역행

수도권(서울·경기·인천)-강원 인구
출처=행정안전부·통계청

▶2023년 10월 말 현재
 수도권=2601만 8365명 (50.66%)
 강원=152만 9500명 (2.97%)

▶2022년 12월 말 기준
 수도권=2598만 5118명 (50.51%)
 강원=153만 6498명 (2.98%)

▶2021년 12월 말 기준
 수도권=2602만 3283명 (50.39%)
 강원=153만 8492명 (2.97%)

강원도 인구 153만명 선이 붕괴됐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강원 등 비수도권 인구 급감소 국면에 여당 지도부가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등 '메가시티서울' 카드를 꺼내들자 경기 하남·성남·과천·광명·구리 등도 서울 편입 의제와 맞물리며 수도권 블랙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2일 행정안전부·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주민등록 기준)는 152만 95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말(153만 712명)과 비교해 한달 새 1212명이 빠져 강원 인구는 결국, '153만명' 아래로 내려앉았다. 1년 전인 지난해 10월 말 기준(153만 7339명)으로 보면 7839명이 줄어 들었다. 최근 3년간, 강원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강원 인구는 153만 8492명이었으나 지난해 말엔 153만 6498명으로 집계됐다. 1994명이 감소했다. 반면, 수도권은 비수도권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일극체제가 공고해 강원 등 비수도권 소규모 지자체는 지방 소멸 위기에 내몰렸다.

올해 10월 말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인구는 2601만 8365명으로 전체 인구(5135만 4226명)의 50.66%를 차지한다. 수도권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2598만 5118명, 2021년 같은 기간 2602만 328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2019년에 처음으로 국내 인구의 50%를 넘어섰고 이 같은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전체 인구의 약 3%에 그친 강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과소'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역외유출, 소득 감소, 지역경제 불황, 정주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또, 도내 초중고교 및 대학의 학생수 감소, 열악한 의료 인프라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국민의힘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메가시티서울' 속도전 에나서면서 기회발전특구 등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이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다. 더욱이, 지난 1년(2022·2023년 각 10월 기준) 간 도내 18개 시·군 총 인구는 춘천과 원주를 제외하고 강릉을 비롯한 16개 시·군에서 모두 감소했다. 인구절벽을 넘어선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것이다.

류중현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메가시티서울' 구상이 나오면서 국토불균형, 지방소멸 해결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이 팽창하면 강원 지역 청년 유출, 산업 및 주거 이동 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지은·김덕형 ▶ 관련기사 3면

2023 11 03 ()

강원도민일보

03

춘천·원주 빼고 다 줄었다... 동해안·폐광지 인구 감소 심화

강원인구 153만 붕괴

강원특별자치도 시·군별 총인구수 추이 단위:명

지역	2022년 10월	2023년 10월	전년동월 대비
강원특별자치도	1,537,339	1,529,500	-7,839
춘천시	286,466	286,645	179
원주시	360,581	361,426	845
강릉시	211,742	209,843	-1,899
동해시	89,421	88,741	-680
태백시	39,553	38,720	-833
속초시	82,781	82,168	-613
삼척시	63,687	62,937	-750
홍천군	67,830	67,346	-484
횡성군	46,516	46,409	-107
영월군	37,797	37,430	-367
평창군	40,982	40,645	-337
정선군	35,027	34,323	-704
철원군	42,500	41,490	-1,010
화천군	23,620	23,113	-507
양구군	21,449	21,179	-270
인제군	32,135	32,003	-132
고성군	27,393	27,353	-40
양양군	27,859	27,729	-130

출처: 행정안전부 통계청

최다 감소 강릉 > 철원 > 태백 순
누적출생아 역대 최저 설상가상

강원지역 인구가 1년 만에 8000명 가까이 줄며 153만명대가 붕괴된 가운데 수도권 인접 지역인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강원지역 모든 시·군의 인구가 감소했다. 2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강원지역 총인구수는 152만9500명으로 전년동월(153만7339명)대비 7839명(0.5%)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춘천(28만6645명)과 원주(36만1426명)는 같은기간 각각 179명, 845명 늘었으나 두 지역을 제외한 모든 도내 시·군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1899명)이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철원(-1010명), 태백(-833명), 삼척(-750명), 정선(-704명), 동해(-680명) 순으로 동해안과 폐광지역의 인구감소가 눈에 띈다.

강원지역의 경우 태백, 삼척, 홍천 등 12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강릉은 지난 10월 기준 20만9843명으로 21만명대가 붕괴했다. 강릉은 2021년 11월(21만3093명) 전월 대비 62명 줄어든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102명) 이후 7월(-162명), 8월(-172명)까지 3개월 연속 100명 이상 줄었고, 9월(-42명) 잠시 주춤했으나 지난달 237명이나 인구가 감소했다.

강릉 뿐만 아니라 태백은 지난해 8월(3만9940명) 4만명대, 동해는 2021년 3월(8만9922명) 9만명대가 무너졌다.

이후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고, 10월 기준 태백은 3만8720명, 동해는 8만8741명으로 집계됐다. 태백의 인구감소율(지난해 말 기준)은 -3.2%로 전국 229개 시·군 중 인천 동구(-4.9%), 충북 영동군(-3.8%)에 이어 3위에 올랐다. 화천(-2.4%)도 인구하락을 기준 9위였으며 철원(-1.7%), 정선(-1.3%) 등도 인구감소율아-1%대를 넘어섰다. 이에 각 지역마다 매년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올해(1~8월) 누적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였으며 3~8월까지 6개월 연속 월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지난 9월 202명이 강원지역을 떠나는 등 출생아, 인구유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우진

“공공기관 이전 대상 비혁신도시 포함하라”

황성군과 영월군, 평창군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동 대응을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비혁신 인구감소 도시 총결기에 동참했다.

김명기 황성군수와 이관우 영월부군수, 황성현 평창부군수는 2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한기호·유상범 국회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에 함께 나섰다. 이 자리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강영석 상주시장, 박남서 영주시장, 김문군 단양군수, 박정현 부여군수 등 전국 11개 시·군 자치단체장 등이 함께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지에 비혁신 도시를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총결기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만 이전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을 그 외 지역으로도 이전하는 것으로 수정해 역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평창군은 올 9월 심재국 군수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동대응, 비혁신 인구감소 도시 총결기대회가 2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김명기 황성군수와 이관우 영월부군수, 황성현 평창부군수를 비롯한 비혁신도시 자치단체장,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황성·영월·평창 혁신도시특별법 공동대응 총결기대회 동참 권성동·한기호·유상범·노용호 국회의원 개정 촉구 성명 참여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문에 서명하기도 했다. 앞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에는 도 국회의원 중 국민의힘 권성동, 한기호, 유상범, 노용호 의원이, 자치단체 중에는 황성·평창·영월군의

에 춘천시, 강릉시도 참여했다. 김명기 황성군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제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실패했다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돼야만 한다”며 “우리의

의지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전국의 시·군이 뭉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우 영월부군수와 황성현 평창부군수는 “진정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비혁신·인구감소 도시 주민의 염원이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무현·조상원기자

강릉화폐전시관서 신사임당·율곡이이 만난다

시 90억원 투입 7일 공식개관 세계 첫 모자 화폐인물 이야기 미디어아트 등 체험공간 마련

세계 최초 모자(母子) 화폐 인물인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를 만나볼 수 있는 ‘강릉화폐전시관’이 이달 공식개관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90억원이 투입된 ‘강릉화폐전시관’이 죽헌동 오죽헌 시립박물관 내 향토민속관리모텔링 공사과 전시물제작·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7일 개관한다.

다만 개관식은 오는 6일 별도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올 6월 개관될 예정이었으나, 콘텐츠 보강을 위해 5개월 가량 늦어졌다.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로 꾸며진 화폐전시관에는 신사임당(5만원권), 아들 율곡 이이(5000원권)와 관련된 각종 유물과 스토리를 담고 있어 향후 지역 청소년들의 새로운 문화·교육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틀에 박힌 화폐 전시 개념이 아닌 나만의 화폐 만들기, 위조화폐 감별체험, 키네틱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체험형 공



세계 최초 모자(母子) 화폐 인물인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를 만나볼 수 있는 ‘강릉화폐전시관’이 오는 6일 개관식을 갖고 공식 개관한다.

간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전시관 내부는 시대별 화폐와 세

계 화폐인물, 우리나라 기념주화를 비롯해 화폐를 활용한 예술작품, 율곡 이이와 신사임당을 주제로 한 오토마타(기계장치로 움직이는 인형이나 조형물) 시연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전시들이 준비됐다.

허동욱 시 문화유산과장은 “오죽헌·시립박물관 내 전시관이 조성돼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찾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반응이 좋으면 야간 시간대 운영도 고려 중”이라며 “강릉의 문화유산을 활용해 새롭게 조성된 전시관인 만큼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제 dusdn2566@kado.net

설악산 중청대피소 새로 짓는다

내년 말 완공 목표

설악산 대청봉 등산객들의 따뜻한 보금자리이며 피난처가 돼 주던 중청대피소가 40년 만에 철거 후 신축된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중청대피소는 지난 1일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정리 작업을 거쳐 이달 중 철거 및 신축 공사가 시작된다. 당초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달 15일까지만 운영하고 지난달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숙박 기능을 대신할 소청대피소의 재오픈이 늦어지면서 지난달 31일까지 중청대피소를 연장 운영했다.

설악산 정상을 오르기 전 마지막 쉼터였던 중청대피소는 1983년 민간산악회가 만든 임시건물에서 시작, 1995년 국립공원공단이 넘겨받아 공식 대피소로 운영해 왔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최대 115명까지 수용할 수 있고 숙박 및 취사 기능을 갖춰 등산객들의 소중한 안식처였다.



◇설악산 중청대피소.

하지만 노후화로 2016년 안전 진단 결과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판정을 받은 데다 법이 개정되면서 철거가 결정됐다.

중청대피소 자리에 신축되는 대피소는 2024년 12월 31일 완공 목표다. 다만 대피 공간, 직원 근무 공간 등만 갖춰 기존 숙박 및 취사 기능 없이 소규모 대피소로 변경된다. 숙박 기능은 1일 재운영에 들어간 소청대피소와 증축을 완료하고 지난달 16일 문을 연 희운각대피소가 대체한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신축 대피소의 경우 2025년 1월 오픈할 예정이나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

2023 11 03 ()

강원도민일보

10

춘천시 의료 시스타트업 센터 제동 '비상'

시의회 두 차례 부결 추진 난항
'속도조절' vs '속전속결' 이전
지자체 경쟁 치열 필요성 피력

의료AI 산업 유치를 두고 지자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춘천시가 추진 중인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사업이 춘천시의회에서 두 차례 부결, 해당 산업 경쟁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조성과 연계해 동면 지내리 822번지에 의료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정밀의료 분야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기업 지원공간을 마련하고, 의료AI 관련 기업의 창업 전주기 지원을 통한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당초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강유역환경정의 친환경 청정공모사업에 선정, 사업 주체가 강원도였으나 지난 6월 춘천시로 사업이 이관됐다. 총 사업비 425억원을 들여 오는 2026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당장 춘천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의료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두 차례 부결했다. 사전 행정절차가 미흡하고 부지조성비용을 시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

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지켜보는 춘천시는 초조하기만 하다. 해당 사업이 한강수계기금 지원을 받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강원도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기금을 그냥 갖고 있으면 안되고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간의 경쟁도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강원도내에서도 원주시의 경우, 의료AI반도체 전문인력양성 등에 대한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미래산업진흥원 출범 등을 예고하는 등 미래산업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를 두고 시의회의 의견은 '속도 조절론'과 '속전속결론'으로 엇갈린다. 배숙경시의원은 "부지 조성은 수

자원공사측에서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춘천시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다"며 "수열에너지 공급 시기는 2028년인데 2026년에 부지를 먼저 조성한다는 것 역시 수열에너지 취지와는 어긋난다"고 밝혔다. 반면 김지숙시의원은 "해당 사업은 수열클러스터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사무공간"이라며 "산업육성은 타 지자체보다 선점이 중요한데 발목잡기라는 우려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상정해 구축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조속한 구축을 위해 시의회를 더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승은

2023 11 03 ()

강원도민일보

12

원주시 '선택과 집중' 긴축재정 강화 돌입

세수결손 영향 정부 예산 감액
시, 성과미흡·중복·선심성 사업
전면 재검토 전략적 재원 배분
지역현안 해결 국비 확보 총력

원주시가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재정운용 방향에 맞춰 '긴축재정' 기조를 강화한다.

올해 시 지방교부세가 당초 예산 대비 928억원 감액될 것으로 통보받은 데 이어 내년 역시 정부 예산안을 토대로 당초 예산 대비 613억원 감액될 전망이다.

시는 내년도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방조금과 행사운영비 등 연례반복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10% 범위 내에서 삭감 조치키로 했다. 행정유지를 위한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는 '동결'을 원칙으로 고강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나섰다. 행정 환경 변화

에 따라 성과미흡, 유사·중복, 예산 낭비·선심성 사업에 대해선 축소, 폐지 등 일몰을 검토 중이다. 대규모 시설 사업의 경우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적 재원 배분, 본격 투자를 해야 하는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 과감히 투자키로 했다. 불요불급한 사업 역시 대규모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긴축재정에 돌입하면서 국비사업도 대폭 축소됨에 따라 재정운용의 어려움 가중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는 매월 '세종방문의날' 운영을 정례화, 지역현안 추진에 꼭 필요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강지원 시 기획예산과장은 "유례없는 재정 비상시국 속 내년도 신규사업과 대규모 시설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나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전략적인 재정 운용,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7일 시의회에 제출된다. 권혜민

‘강릉 29도’ 때아닌 여름 날씨 벼이삭 다시 패고 봄꽃 활짝

관측 사상 11월 최고 기온
주말 비 온 뒤 더위 물러가

2일 강릉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치솟으면서 1911년 관측 이래 112년 만에 역대 11월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일 오후 4시 기준 낮 최고기온은 강릉 29.1도, 속초 27.5도, 동해 27.2도, 북춘천 25.9도, 정선 25.8도 등으로 관측 이후 가장 높은 11월 일 최고기온으로 기록됐다.

기상청은 “따뜻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햇볕에 의해 지면이 가열되면서 강원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평년(11.1~17.3도)보다 10도 이상 올랐다”고 설명했다.

때아닌 한여름 무더위가 이어진 강릉에서는 이상현상도 속출했다. 이날 강릉 죽헌동 오죽헌 인근의 한 논에서는 수확이 끝난



◇2일 추수가 끝난 강릉시 죽헌동 한 논에서 벼 이삭이 다시 패 눈길을 끌고 있다. 강릉=권태명기자

벼들이 30cm가량 다시 자라며 이삭이 팠다. 봄에 주로 개화하는 자두꽃과 영산홍 등도 활짝 핀 상태로 목격됐다. 20도를 훌쩍 넘는 낮 기온에 초파리가 기승을 부리면서 강릉시는 방역 기동반을 투입, 방역 작업에 나섰다.

갑작스러운 무더위는 금요일부터 주말 내내 비가 내리며 물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3일부터 5일까지 강원 전역에 5~40mm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김오미·류호준기자

江原日報

2023 11 03 ()

/ 25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복구, 국회가 나서야

정부는 올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신문 발전기금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10억원 가까이 삭감했다. 즉, 82억5,100만원이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내년에는 72억8,2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주민들과 밀접한 취재·보도 관련 부분을 비롯해 초·중·고교생들에게 신문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한 지역신문활용 교육지원비는 무려 8억원이나 깎였다. 지역인재 인턴 프로그램 예산마저 손을 대 85명이던 인턴 채용 계획을 40명으로 축소시켰다. 이는 지역 여론 형성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신문의 중요성을 백안시하는 처사다.

더욱이 이는 정부 정책 방향과 상충된다. 즉,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향후 5년간의 지역발전 계획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지난 1일 내놓았다. 그동안 별도로 수립돼 온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계획을 통합해 만든 첫 대책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대책이다. 이러한 대책은 지역 언론의 뒷받침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국가 균형발전이나 지역소멸 같은 부정적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신문이 살아 있어야 한다. 이윤 추구적인 시장 논리에 따라 지역 신문이 소외당하지 않고 일정한 생존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이 시대의 막중한 과제다. 지역 신문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역 신문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원천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보도와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인터넷 등 다매체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역 사회의 건전한 공론을 형성하는 지역 신문의 역할은 변함없이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 때문에 국회가 2021년 10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한 것도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의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삭감은 국가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색게 한다. 이는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박진오 강원일보 사장)가 1일 성

정부, 10억원 깎아 내년 예산 72억8,200만원

지역 여론 형성 중심 신문 역할 '백안시'

국회, 균형 감각 갖고 정부 예산안 심의를

명을 발표하고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의 원상 복구를 촉구하고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이제 국회가 정부의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원래대로 복구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할 국회 예산 심의는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됐다. '예산국회'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문가 공청회, 경제·비경제부처 예산 심사 및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하고 이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국회는 이 과정에서 균형 감각을 갖고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복구시켜야 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1 03 ()

/ 19

풀뿌리 민주주의 외면할 것인가

-정부 '지역신문발전계획' 발표해놓고 예산은 감액이라니

수도권 초집중과 서울언론 과점으로 인해 지역신문이 위기에 처한 현실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대폭 깎았습니다. 2024년 지역신문발전지원예산을 전년보다 11.7%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작년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됐고 올 9월엔 정부에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마련해 증액 기대감이 컸는데 도리어 찬물을 끼얹은 형국입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지역신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지역신문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정작 예산에 대해선 칼질하는 이중적인 행태입니다. 더구나 24년부터 일반예산 전입금 지원을 전면 중단해 파장이 큼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국비 전입금 전면 중단은 기금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는 사안입니다. 지역신문대 서울에 본사를 둔 전국신문 시장 구조는 15대 85대로 극심한 불균형상황을 더 악화하는 처사임은 물론입니다.

정부는 지역신문 진흥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내년 사업비 규모를 올해보다 10억원 가까이 줄임으로써 정책에 일관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면한 처사라는 반발이

큽니다. 지역언론단체 및 언론시민단체에서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에 반발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29개사를 비롯해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사, 2023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신문사주간지협의회 50개사, (사)바른지역언론연대 53개 회원사 등은 한 목소리로 정부 처사를 비판했습니다. 대신협은 지역신문 경쟁력을 높이고 건전언론 육성 차원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된 취지를 무색게 해 실망감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23년 기준의 원상복구 및 정부 전입금 20억원 지원이 추가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역신문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동반자입니다. 쇠퇴일로에 있는 비수도권 지역 실상을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해 지역발전의 추동력 확보하고 공동체의식을 끌어냄으로써 민주주의 가치를 증진하는 지역신문을 폄하해선 안 됩니다. 정부가 세수감소를 이유로 필요한 분야에서 예산 구조조정을 강요하다시피 하는 과정에서 지역신문에도 그 짐을 고스란히 떠맡기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정부는 지역언론계 요구에 부응해 국회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1 03 ()

/ 19

윤 정부 '지방시대' 균형발전 헛말되나

-여지도부 서울 몸집 불리기 추진, 당장 멈춰야

'서울지상주의'가 새롭게 만연할 조짐을 보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경기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한 데 이어 특별법 발의를 공식화하면서 서울시의 몸집을 불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향후 김포뿐만 아니라 구리시 등 인접한 경기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비수도권 지역주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마침 김대표에 의해 이 소식이 공표된 11월 1일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회에서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 수립했다면서 홍보하며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발표된 날과 공교롭게 겹칩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 충격파로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표방한 지방시대 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지역 과제정책 후속 논의에 대한 공론화는 힘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엇박자를 내는 상황에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여당 지도부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특정 지역에 한정해 서울 편입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

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더 있습니다. 이런 문제라면 전국을 대상으로 해야 설득력이 있고, 국도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도록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처리할 사안입니다.

이번 서울의 몸집 불리기 시도는 단지 김포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기도 다른 지역으로 번질 수 있는 것은 물론 비수도권 지역 인구가 이탈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수면 아래의 '서울지상주의'에 불을 붙이면서 그러지 않아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이탈 현상 및 지역대학, 공공의료 붕괴 현상을 부추길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자원이 초집중된 서울 이동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는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기초적인 의료문제와 지역대학 문제로 몸살을 앓는 현실을 외면한 국토 균형시대 역행 의제에 비수도권의 지지가 높을 리 만무합니다. 여당 지도부는 11월 1일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발표한 대로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지역 어디서나 질 좋은 교육이 있어 지역 혁신성장이 확보되도록 전력을 쏟을 때입니다. 당장 서울 몸집 불리기는 멈춰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 11 03 ()

/ 25

소상공인 빚 평균 1억2,700만원, 돌파산 막아야

도내 소상공인 2명 중 1명은 부채가 있고 그 규모는 평균 1억2,700만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 침체 속 고금리가 지속되면 가장 먼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무너진다. 자칫 돈줄이 더 마르면 돌파산·줄폐업 공포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들의 빚폭탄이 지역경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시급해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1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 중 절반(49.1%)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평균 부채 규모는 1억2,700만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5,000만원'이 5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1억원 이상'(30.7%),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15.1%)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코로나 시기 동안 이 정도 규모였다면 지금은 더 불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정부와 금융권의 저금리 대출과 정책자금, 대출 만기와 원리금 상환 유예에 기대어 버텨 왔지만 혜택이 사라지면서 고금리 직격탄을 맞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1,800조원을 넘어선 거대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뇌관이다. 특히 경기 위축 속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여건은 갈수록 악화하는 모양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 2분

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9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였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도 역대 최대인 7조3,000억원에 달했다.

경기 침체 속에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돼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데다가 고물가와 공공요금 증가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와 여당이 당·정·대 고위협의회를 진행, 이례적으로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적용될 예정이던 환수 조치 백지화를 결정한 배경과도 연관돼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만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는 않을 것이다. 추가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고금리가 장기화하고 연체율마저 가파른 폭증세여서 가계부채가 자칫 가계경제를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단기간에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을 순 없지만 대응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단순 금융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골목상권 소비 촉진에 집중한 섬세한 정책과 부채 증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대책이 필요하다.